

“檢 수사 미진하면” vs “조건없이 수용을”

여야 ‘대장동 특검’ 신경전

민주 “검·공수처 수사 협력” 국힘 “대선 전 결론 내려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퉀 ‘대장동 특검’을 강조하고 있지만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국민의힘은 당장 특검을 도입해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재촉했다.

“조건부 특검 수용론”을 내건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무게를 실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철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취지”라며 “지금 단

계에서는 검찰·공수처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KBS 라디오에서 “대개 지금까지 특검이 논의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으로 넘길 때까지 철저히 수사하란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대 특검이 모두 그랬듯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특검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체 없이 특검을 도입하자”며 “조건부 특검론”을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최대한 대선 전에 결론

을 내려야 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보실 때 선택의 기준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을 겨냥해 “국민 여론을,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또 그냥 속임수 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 후보는 아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으로 시간 끌기 막장드라마를 중영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결백을 인정받고 싶다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 선대위 ‘실세’ 총괄본부장 없애고 권한 분산

조직은 ‘수평’ 인선은 ‘탕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서 ‘실세’ 총괄선대본부장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총사령탑격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우되 그 밑에 힘이 집중되는 사전 사령탑 역할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두는 대신 분야별 총괄본부로 권한을 분산하기로 하면서다.

핵심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대위 조직도 초안이 80%가량 완성됐다”며 “핵심은 모든 실무를 관할하며 ‘복 치고 장구 치는’ 총괄선대본부장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 경선 캠프에서 권성동 의원이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한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1인’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진급 인사들을 예우하기 위한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도 최소화할 전망이다. 대신 총괄선대위원장 아래 정책, 조직, 직능, 홍보 등 4~5개 분야별 총괄본부를 ‘수평적’으로 병렬 배치해 중진들에게 본부장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

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요구해온 ‘실무형’ 선대위 모델과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결 조건’과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김 전 위원장으로서 분야별 총괄본부를 직통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윤 후보 측 입장에선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의 요구를 두루 충족시키는 ‘묘수’를 낸 셈이다.

선대위 조직도가 완성되면 개별 보직 인선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도에서는 수평적 구조에 방점을 찍었다면, 구체적인 인선 단계에선 ‘탕평’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윤 후보 경선캠프의 핵심 참모뿐 아니라 다른 예비후보를 도왔거나 경선을 관망하던 당 안팎 인사들을 폭넓게 중용해 ‘더 큰 선대위’를 출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총괄본부장급 후보군으로는 주호영·권영세·윤상현·김태호 의원과 나경원·김용태·임태희·정태근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이재명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 원혜영 내정

외연확장 본격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국가인재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혜영 전 의원을 내정했다.

14일 한 관계자는 “당 국회의원과 원외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톱 선대위 구성이 일단락됐고 이제 원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위 구성을 조만간 완료하고 외부 인사 영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말했다. 원 전 의원을 내정한 배경에 대해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인재로 이재명 정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를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21대 총선에서 불출마한 원 전 의원은 민주당 원

내대표, 민주당합당 대표 등을 지낸 여권의 원로 인사다. 이른바 ‘통추(국민통합추진회의)’ 출신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그는 합리적 온건파로 꼽힌다. 풀무원 창업자인 원 전 의원은 현역 때 민생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선대위는 앞으로 인재 영입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중도, 여성, 청년, 콘셉트를 갖고 민주당에 취약한 세대·계층 등을 대표할 인물을 찾을 예정이다. 나아가 이 후보의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분야의 인재들도 합류시킨다는 방침이다.

선대위는 인재 영입의 제1원칙으로 ‘탈진영’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선대위에 중도·통합적 이미지를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차기 정부에서 실제 일할 사람을 미리 뽑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보겠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영입되는 인사들을 집권시 차기 정부 ‘새도 캐비닛’(그림자 내각)을 위한 인재풀로 삼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원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권을 해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선거에 이기기 위한 인재 영입이 아니라 ‘집권을 했을 때 국정을 잘 운영하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시리즈 관람하는 윤석열 후보 국민회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kt wiz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20대 소득세 면제’ 검토…野 “아무 공약 대잔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연중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대의 소득 사다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선대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세대별 가구소득 증감률, 순자산 증감률 등을 보면 전 세대가 오르는데 20대만 떨어지고 있다”며 “20대의 소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이미 있지만,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청년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제도를 확대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는 이날 민주당의 ‘20대 소득세 면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다급해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무 말 대잔치에 이어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정 세대에겐 소득세를 완전히 면세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20대를 고립시킨다”며 “29세는 소득세가 없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면 소득세를 징세하는 것은 무슨 형태의 공정이냐. 생일선물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세에 갖가지 공제 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아무리 소득세 면세해도 민주당이 수억 원씩 올려놓은 집값을 근로 소득으로 못 모은다. 주택 공급으로 집값이나 낮출 생각 합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재명식 갈라치기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안 “김동연과 단일화?” 힘 합칠 여지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4일 제3지대 세력화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쨌든 힘을 합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기득권 양당이 사실상 적폐 교대를 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많이 가진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부총리와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면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그 쪽이 양보하면 압도적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민주당, ‘尹가족비리 특위’ 띄운다

본인·부인·장모 의혹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본인 및 가족 의혹과 관련해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총괄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선거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던 윤 후보에 대해 ‘윤 후보에 대한 고발사주 TF’를 확대 개편해 가족비리 검증특위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윤 후보의 장모와 부인 모두가 주가 조작 사건,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여 있고, 본인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엄포를 놔다.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은 맡은 전재수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윤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를 묶어 ‘본부장 의혹’이라고 규정하면서 “본부장 의혹으로 검증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10건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윤 후보와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해야 한다”며 “(부인의) 학력 위조나 코바나콘텐츠 기업협찬 문제 등 이왕 특검하려면 모든 의혹을 깨끗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110m (약 203평) 4 6m 도로

1 200평 2 300평 3 160평 4 160평
5 150평 6 150평 7 150평 8 150평 9 150평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